

교육장관보다 돈 더 받는 호남대 이사장

연봉 1억9200만원...초당대학교도 1억5000만원 학교법인에 부과된 법정 의무 부담금은 '나몰라라' 여영국 의원 "사립학교법 살전고양이법 제정 필요"

호남대학교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6일 밝힌 사립대학교 법인 상근임원 보수 지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호남대학교 이사장의 연봉은 1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받는 연

봉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 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이며, 국무총리 1억7901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543만원, 장관 1억3164만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와 정월급식비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의 연봉

은 2억7087만4000원이고 국무총리는 2억121만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5307만5000원, 장관은 1억4808만원, 차관은 1억4080만5000원이다. 초당대학교 이사장도 연봉이 1억5000만원으로 장관보다 많았다. 이 밖에도 광주대학교 상임이사 10명도 연봉이 많았다. 이처럼 학교법인 임원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호남대와 광주대는 2018년 기준 법정 의무 부담금을 각각 18.3%와 15.3% 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국고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 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면서 여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어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살전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립학교 이사장은 단국대학교로 무려 2억6749만2000원이나 받는다.

이슈판결

"택배 배달원 추락사, 곡성군에 1억원 배상 책임"

광주지법 "가드레일 설치 안돼 운전중 추락사고 발생 위험 커"

법원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하천에서 택배차량이 추락해 배달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사망 당시 34세)의 자녀 등 5명이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곡성군에게 1억1298만원을 A씨 등 5명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택배 배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오후 10시30분쯤 곡성군 오곡면의 한 도로 옆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는 2.4m 아래에 하천으로 추락해 좌측으로 전도돼 있었고, A씨는 차량에 눌린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택배배달을 위해 수취인과 통화를 마친 후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하차를 했고, 약간의 오르막 경사길에 차량이 뒤로 밀린 것을 발견한 A씨가 사고 차량을 멈추고자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도로와 하천 사이의 경계에는 가드레일 등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곡성군은 A씨가 숨진 후 마을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차량 회전을 위해 일부 도로는 콘크리트 방지턱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경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은 운전 중 하천으로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드레일 등 차량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곡성군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도 도로에 추락방지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차량이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차량에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와 하천 사이의 경계에는 가드레일 등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곡성군은 A씨가 숨진 후 마을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차량 회전을 위해 일부 도로는 콘크리트 방지턱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경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은 운전 중 하천으로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드레일 등 차량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곡성군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도 도로에 추락방지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차량이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차량에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재 치료 위해 통원하다 사고로 사망해도 신재"

행정법원 "질병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상병 발생 인과관계 인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A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992년 이환화탄소 증독증과 난청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약을 받은 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중 A씨는 자전거에서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정씨는 "남편이 평소 이환화탄소 증독증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환화탄소 증독증 등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환화탄소 증독증 등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 '12·12 오찬 동석' 극동방송 이사장 사퇴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개혁 성향의 종교단체가 전두환 '12·12 호화 오찬'에 동석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와 광주 개싸움국민운동본부, 광주·전남·전북 기독교교회협의회(NCC) 등은 26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며 "목사라면 예언자 정신에 따라 역사의 정의를 거스른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이어 "김 목사는 학살범들과 오찬을 하며 전두환을 '각하'라고 부르고 12·12오찬과 관련해 '(전두환씨)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해명



2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극동방송 앞에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단법인 평화나무 등이 '전두환-김장환 12·12 오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5·18당시 광주상황 신군부에 보고한 김장환은 공범 "전두환씨 전도 위해 만남 가졌다는 해명은 어불성설"

치평동 광주극동방송 앞에서 '전두환·김장환 12·12 오찬 규탄 집회'를 열고 김장환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평화나무는 "김장환 목사는 국민으로부터 지상파라는 공공재를 위임받은 방송사의 실소유주"라

을 했다"며 "학살범들이 벌인 '성공한 쿠데타' 자축연에서 전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광주의 동태를 파악해 전두환에게 보고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김 목사는 5월 당시 광주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전두환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진실에 어긋남 없이 해명하라"며 "학살 작전을 돕기 위한 정보 수

집은 아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학살 공범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뇌물수수 의혹'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혐의 없음 처분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6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최 전 구청장은 이날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4명

과 브로커 2명 등 총 6명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최 전 구청장은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해왔다. 뉴스1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